



부패한 우익
이동관
2면

민주당의 불안정
5면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8~10면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15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16, 15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4~5면

미·중 갈등 격화로

한국 정치권

내부 갈등이

더욱

불거지다

관련 기사 3면

역겹도록 부패한 수구 우익, 이동관

윤석열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이동관 임명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동관이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한 일에 공분이 상당하다. 부패한 특권층의 악독한 행태였다.(관련 기사: '정순산에 이어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논란' 부패 특권층의 정부답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이동관 자녀의 지속적 학폭 가해를 보여 주는데도 이동관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그저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었을 뿐이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지 압력 행사는 아니었다고 발뺌한다.

그런데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서민층 부모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고가 2012년 이동관 아들의 사건만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가관인 점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확산되던 시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이동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두 분[유시민, 김두관]은 거물이잖나. 존재 자체가 압력인 것이다. 전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JTBC <라이브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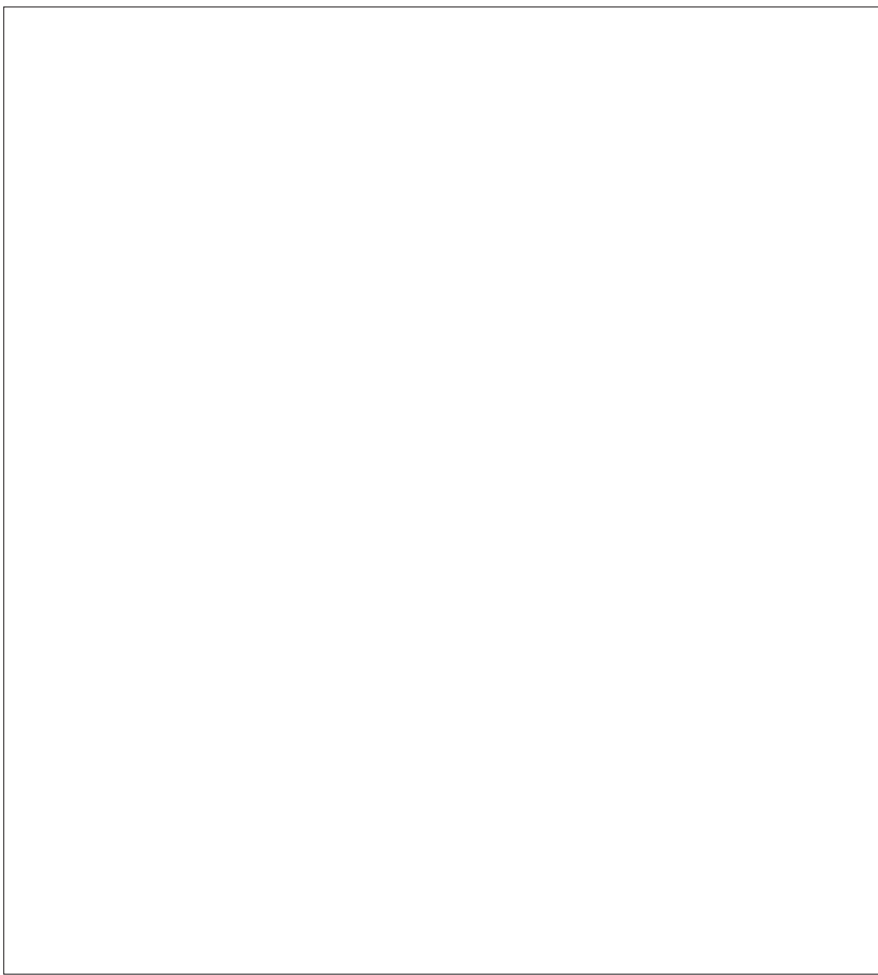
이동관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진 2012년은 이명박 정부 5년차였고,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돌아가며 지낸 자타공인 정권 ‘실세’였다. “존재 자체가 압력인 것이다.”

이동관은 조국 딸 문제 관련해 이런 얘기도 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알 수 있다.”

감탄할 만한 뻔뻔함에 반감이 커져자, 여권 내에서도 이동관 임명 강행은 무리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뺏속까지 우파

이런 자를 중용하려고 하다니, “불법”, “비리”, “폭력” 운운하며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이 정부의 역겨운 위선이 다시 한 번 빛난다. “불법”, “비리”, “폭력”은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이동관의 과거 이력과 발언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동관은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명박 후보 캠프 공보단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2016년 총선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시도했다.

이동관은 뺏속까지 우파이고,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의 좌편향을 시정”한다면서 뉴라이트 운동에 헌신해 왔다.

그는 이승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치켜세우고, 이명박·박근혜 등 부패하고 부정한 지도자들을 부끄러움 없이 찬양한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동관은 “자애로움과 잔 다르크 같은 일을 다 하고 계신다”며 박근혜에 아부하는 한편, “농락당한 위안부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다.

그런가 하면, 2016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고, 단군 이래 최대 외교행사인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UAE 원전 수주의

역전 드라마 등이 지금도 가슴 벅찬 순간들로 기억돼요.”(<백세시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 나온 2008년 촛불 집회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한 번 퍼지면 전염병처럼 건잡을 수 없이 사회 전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 병리현상”이었다고 비하했다.

윤석열이 왜 이 자를 놓지 못하는지 알 만하다.

언론 장악 사냥개

윤석열이 이동관을 데려다 무얼 하려고 하는지도 문제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KBS·MBC·YTN 낙하산 사장 임명, 광우병의 진실을 파헤친 <PD수첩> 제작진 체포,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투쟁한 YTN 노동자들 해고·구속,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 KBS 시사 프로그램 폐지, 김미화·김제동·윤도현 등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 숙아 내기 등이 이동관이 이명박 정부 실세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이동관이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지휘한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는 것은

최근 폭로된 문건으로 확인됐다.

“좌편향 진행자 퇴출 및 고정출연자 교체 ... 가시적 성과 미흡시 문제 프로그램 폐지·포맷 변경”(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보수단체들과 협조, 방송사의 좌편향 선거 보도 견제 활동 강화 및 자생적 선거 보도 감시 단체 조직화”(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이 보고서들은 이동관이 이끄는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실이 직접 작성했거나, 국정원에 요청해 보고받은 것이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제작진, 출연자들을 숙아 내고 길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이 나온다. 이 보고서들 중에는 “문제 보도”를 “비보도 처리”하는 등 일상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제한 정황도 담겨 있다.

이런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다니, 그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은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해 길들이려 해 왔다. 경찰은 올해 초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월 말에는 이른바 ‘바이든 욕설’을 보도한 MBC 기자의 자택과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입만 열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민주적 권리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부·여당은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해 방통위의 영향권 하에 두고자 해 왔다. 제평위는 네이버, 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뉴스 검색 노출 여부와 콘텐츠 공급 계약 등을 심사해 왔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되면, 이동관의 방통위가 포털사이트의 뉴스까지도 통제하게 될 우려도 크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정부 지지율이 회복했다지만, 쉽 없는 반노동·반서민 공격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반감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는 반발을 더 키울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는 MBC와 YTN 등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고, 이 투쟁은 커다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 반대로 정권을 비호하는 언론·방송사들은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졌었다.

이현주

중국 대사 싱하이밍 발언 둘러싼 소동

미·중 갈등 격화가 한국 정치권 내 갈등을 격화시킨다

김영익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6월 8일 싱하이밍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윤석열의 외교 노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부통령 이던 2013년,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에게 한 발언을 비튼 말이기도 하다. 당시 바이든은 박근혜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풀하는 것은 절대 좋은 베풀이 아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싱하이밍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뻔뻔한 짓이다. 자신들이 하면 “충고”이고 중국이 하면 “압박 전술”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 불’이다.

싱하이밍의 발언에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크게 반발했다. 윤석열이 직접 싱하이밍을 가리켜 구한말에 조선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원세개] 같다고 말했다.

이는 싱하이밍뿐 아니라, 그를 만난 이재명도 공격하는 말이다. 국민 의힘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중화 사대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본지가 이전부터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한반도 주변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 한국에서 지배계급 내의 갈등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름은 앞으로 더 격화될 것이다.

물론 싱하이밍은 중국 외교관들의 ‘전랑 외교’, 즉 거침없는 언행으로 중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싱하이밍은 위안스카이가 아니다. 오늘날 한·중 관계는 140년 전처럼 중국이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우파들은 이런 부적절한 비유를 들며 한미일 동맹 강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하려 한다.

‘4불가’

싱 대사 발언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중 갈등이 최근에 더 첨예해진 가운데 한·중 간에



미·일 제국주의 협력에 매진하는 윤석열이 “민주당은 사대주의” 비난하는 것은 옳도당도 않다

도 긴장이 쌓여 온 상황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거듭 모순에 봉착하면서도 실제로 미국 쪽에 “베풀” 하는 것을 선택해 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국제 질서 유지에 협력하는 게 한국 자본주의에 이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4월 윤석열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만 문제를 “세계적 문제”라고 했는데, 이는 분명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입장이었다.

윤석열의 이런 선택은 당연하게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반발을 사 왔다.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에 자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한국에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친미·친일 외교 정책을 견제해 왔다.

지난달 22일 한·중 외교 국장급 회담에서 중국 정부는 ‘4불가’ 방침을 윤석열 정부에 전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가면 협력 불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시진핑 방한 등 고위급 교

류 불가, 악화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가 그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4불가’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그런 방침을 한국에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후시진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편집장은 한국이 “제2의 호주”가 됐다고 했다. 2020년에 미국과 손잡고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자며 중국과 격한 갈등을 겪은 호주에 지금의 한국을 빗댄 것이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한·중 긴장은 시간이 지나면 일시 봉합될 수도 있다. 이 소동 전에 윤석열 정부는 (비록 중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지만) 시진핑의 연내 방한을 제안했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다.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에, 윤석열 정부도 나름 줄타기를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고 있고 한국이 제국주의적인 그 갈등의 무대 중 하나라는 점은 변함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미국 쪽으로 꾸준히 “베풀”한 것은 그로 인한 한·중 긴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적 갈등도 부추기는 것이다.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은 한국 등 관련국 각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의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0년대 초 이후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 지배자들은 큰 딜레마를 안게 됐다. 한미동맹이 주는 경제적·안보적 이익과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사이에서 고심하게 된 것이다.

싱하이밍-이재명 만남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충돌은 한국 지배자들이 이 딜레마를 풀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며 윤석열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우선하되 중국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해 왔다.

일각에서는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실리를 챙기는데, 윤석열 정부만 유독 대중국 외교를 손놓는 바람에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 시스템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지배자들의 어려움은 미국과 중국 간 적대가 커지면서 윤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물론 미국과 중국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려고 때때로 외교적 접근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두 강대국이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은 현 세계 시스템 안에서 온전히 풀기 불가능한 문제다.

올해 초 중국의 “정찰 풍선”이 자아낸 긴장이나 6월 3일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들이 충돌할 뻔한 사건 등은 미·중 관계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힐끗 보여 준다. 반도체 전쟁 같은 경제적 경쟁도 양측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한국 지배자들이 처한 딜레마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외교적 수완으로 온전히 헤쳐 나가기 불가능한 문제다. 거대한 반제국주의 대중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핵 오염수 방류, 일본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하세가와 사오리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청년. 한-일 통번역사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그들을 대변하는 연구자들이 TV·신문 등 언론을 통해 핵 오염수가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연일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핵 오염수 방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해 침묵하는 사람도 많다.

후쿠시마현의 어업인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생계를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기준보다 절반이나 낮은 수치를 출하 기준으로 정하고 방사능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험조업을 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방류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그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 또다시 심각한 생계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명백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해 일어난 사고였다.

그럼에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고 이후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계와 핵 오염수 방출 문제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생계를 위해 타협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있다.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시민들에게 ‘관계자(국가, 도쿄전력,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연합회)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그 약속을 파기하려 한다.

어업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핵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쿄전력은 이미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육상 시설, 해저 터널, 해저방출구 설치 공사를 추진했으며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안전’한 기준치?

체르노빌을 제외하면 인류 역사상 후쿠시마만큼 많은 방사능 물질이 방출된 핵발전소 사고는 없었다. 어떤 경로로 어떤 세대, 어떤 시기에 건강 피해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방사능 물질 방



5월 16일 도쿄 시내 긴자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대 "오염수를 바다로 흘리지 말라"

출량과 방출 핵종,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 등이 주장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준비를 하면서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도 처리할 수 없는 삼중수소나 탄소14를 비롯한 방사능 물질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사고 직후 후쿠시마에서 늘어난 갑

상선암 등 건강 피해에 대해서도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규명해 내지 못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거짓되고 무책임한 태도에 많은 일본 시민들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어업인을 비롯한 후쿠시마 주민들, 일본 전역의 시민들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조금씩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지지를 보내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정부의 거짓말과 ‘괴담’ 수사 협박이 통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월 12일 국회 앞에서 2차 전국행동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어민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의당·진보당·환경단체 등도 깃발을 들고 참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단에 올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6월 24일 서울 시청 앞 3차 전국행동을 예고했다.

지역에서도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6월 13일에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제주민대회가 열렸다. 주민들과 해녀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이를 방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부산에서도 부산여성단체연합과 부산학부모연대 등 35개 단체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 오염수 방류를 막을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6월 23일에는 울산에서, 7월 8일에는 부산에서 각각 집회가 예정돼 있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퇴진 집회도 6월 17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요구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6월 17일 인천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인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항의 행동이 늘어나고 천일염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불안 징후가 확산되자 정부도 마냥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핵 오염수를 ‘마시겠다’며 뻔뻔했지만, 정부는 15일부터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일일브리핑을 시작했다. ‘괴담’으로 일축하며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인정

6월 15일 첫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다고 인정했다. 반면 다핵종제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관해서는

“일본 측은 …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 하고 말해 사실상 자신들이 확인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정부 시찰단이 도쿄전력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균영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해양 방류에 동의한 것처럼 말하자, 해수부 차관이 나서 “한국 정부는 아직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주위 답는 일도 벌어졌다.

또, 주일 한국 대사는 일본 지지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오염수 방류 안전성 설득해야” 한다

▶ 3면으로 이어짐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최근 <한겨레>가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시리즈 기획 보도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으로부터 민주당이 충분히 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정의당이 득을 보는 것도 아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도덕성과 신뢰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때마침 6월 13일 전당대회 돈봉투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을 궁지에 몰려는 검찰의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녹취록에 있는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변호하긴 어렵다. 돈봉투 의혹은 민주당도 부패한 기성 정치에 연루돼 있음을 보여 준다.(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증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버리 보호당”이라고 비아냥댔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다른 누군가를 부패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메스꺼운 일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통령 배우자의 계좌가 주가 조작 사건에 이용된 게 재판에서도 인정됐는데도 김건희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을 구별하지 않고 싸잡아 말할 순 없다.

가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당한 것이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자격으로 한 정책 수행의 문제를 증거도 없이 대선자금 비리 운운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구속까지 시키려 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개혁 염원은 여야 협치가 아니라 반정부 투쟁을 확대시켜야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신뢰성 위기는 두 가지를 구별해서 봐야 한다. 하나는 수사를 빙자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자신의 개혁 염원 배신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 운운해 놓고는 개혁 염원을 배신한 것에 대한 환멸이 여전히 크다.

윤석열의 노림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조한 지지율,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대화 중단이 상징적으로 드러낸 계급 지배 이데올로기 실패 등등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다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곧바로 레임덕으로 빠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내년 총선에 명운을 걸고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장사꾼이 밀지고 판다는 말이나 같다.

정치 양극화 속에서 윤석열은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반윤석열층은 김을 빼고 분열시키는 식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

최근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과 노동조합 탄압도 그 일환이다. 무리해서 흠 많은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을 앉히려는 것도 총선을 앞두고 방송 통

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흠집 내기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투표한 개혁 염원 대중에게 환멸과 대안 부재감을 심어 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가 민주당에 개혁 입법 추진을 주문하면서 ‘협치’를 당부하는 것은 모순된다.

<한겨레>가 지적한 차별금지법이나 낙태죄 대체 입법은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로 말뿐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포기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 법안들의 표류는 국힘과의 협치 노선으로는 개혁 입법(제대로 된 것이든 아니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세 피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여야가 시급히 합의한(협치) 전세사기 피해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 당사자에게 곧바로 항의를 받을 정도로 쓸모가 없다. 보상 범위 확대와 전세보증금 국가 지원 문제 때문이다.

반윤석열 투쟁

따라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개혁 염원은 여야 협치가 아니라 반정부 투쟁을 전 노동계급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만 상당히 실현될 수 있다.

개팔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부가 우파와의 타협 노선에 반대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 김남국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친자본주의적) 위선을 일절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개혁을 약속해 지지층을 묶어 두려고 하면서도 우파의 반대를 이유로 개혁 염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다.

이재명 지도부가 개혁을 표방하고 미흡하나마 두어 개의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결코 과감하게 개혁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우파의 반대를 이유로 대면서 과감한 개혁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도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기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자신은 민주당 비주류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흔히 부당한 십자포화를 맞아 왔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지내면서, 자신의 취약한 입지를 만회한다는 이유로 주류와 점점 타협해 왔다.

특히 (자신의 강성 지지층과는 달리)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을 비판하지 않았다. 최근에 정부의 천안함 북한 소행설을 믿는다고 한 것도 전혀 불필요한 후퇴다.(이 대목에서 상기하자면, 문재인은 집권하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우파가 반발하자 추진을 중단해 버렸다.)

그러므로 민주당에 대한 개혁 염원 대중의 불신은 그 당의 친자본주의적 성격 때문에 개혁 표방이 대부분 구두선에 그치고 말거나 미온적인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본주의 위기 시대에 자본주의와 (진정한) 개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김문성

▶ 2면에서 이어짐

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 조승환은 6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사국 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핵 폐기물 해상투기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일본 정부는 자신들에 더 친화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져 왔다. 일본 정부가 ‘핵 폐기물 해상투기’가 아니라 ‘처리수 방류’일 뿐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런던협약의 핵 폐기물의 해상투기 금지 조약은 핵폐기물 반대 운동의 압력으로 1983년 2월 도입됐지만 임시 조처였고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해 6월 영국 노동자들이 환경 운동 단체인 그린피스 측의 호소를 받아들여 영국 정부의 핵 폐기물 운반을 거부하는 행동을 벌임으로써 실질적 조치로 자리

잡았고 이후 영구적인 조치가 됐다.

일부 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자신감이 높지 않고 반대 압력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운동이 더 커져야 한다.

장호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집권도 하기 전에 배신하는 영국 노동당

지난주 영국 정치에서 중요한 사건이 셋 있었다. 가장 나중의 사건인 니콜라 스터전[스코틀랜드 사회당(SNP) 대표]의 체포는 다른 데서 [〈소셜리스트 워커〉 신문, 제2859호, 2023. 6. 12의 다른 기사를 말함]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보리스 존슨[전임 총리,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재임]의 의원직 사임이다. 존슨은 [‘파티게이트’ 진상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더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기 전에 알아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두서 없이 투덜거리고 진실을 호도하며 사의를 밝힌 존슨은 “일단은” 떠나지만 두고 보라는 식으로 올라탔다. 그러나 존슨이 복귀를 도모할 만한 평판과 지지를 누리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보수당 정부의 난맥상

이 점에서 존슨은 도널드 트럼프와 다르다. 트럼프도 지난주 악재를 맞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앞길을 뒤덮은 수많은 기소장들은 심중팔구 그의 거대한 극우 지지 기반을 강화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경력을 쌓는 내내 법정 다툼에 이골이 난 자이고, 이번에 기소된 사건들의 처리 절차를 한없이 질질 끌 것이다.

게다가 설령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트럼프는 최근 사망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그의 사망은 기쁜 소식이었다)처럼 어떻게든 교도소행을 면할 공산이 크다.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면 수사를 더 쉽게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영국 보수당 내에도 트럼프 세력에 비견할 만한 자들이 있지만, 수엘라 브레이버먼[현 내무 장관] 등 보수당 지도자들은 존슨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야망에 몰두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존슨은 취약하고 분열돼 있는 리시 수낙 정부를 여전히 괴롭힐 수 있다. 존슨과 그의 동맹자들은 [손발을 맞춰 함께 의원직을 사퇴해] 보수당으로 하여금 보궐 선거를 치르게 하느라 여념이 없다. 선거가 열리면 보수당이 이기기 쉽지 않은데도 수낙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보수당의 이런 난맥상은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 보수당 정부가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영국 노동당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일부 모방하려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할 개연성을 높인다. 이것은 이 글 서두에서 말한 세 가지 중요한 사건 중 세 번째 사건으로 이어진다. 지난주 초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스타머 프로젝트: 노동당의 놀랄 만큼 대담한 경제 정책.” 이 기사가 나오기 전, 노동당의 예비 재무장관인 레이철 리브스는 미국을 방문해 [5월 24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설을 통해] 노동당의 경제 정책을 부각시켰다.

그 정책의 핵심은 2021년 9월에 스타머가 개괄한 바 있는데, 2030년까지 해마다 280억 파운드(약 45조 원)를 차입해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즉, 풍력 발전과 주택 단열, 배터리 공장 건설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대상에는 핵발전

도 포함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제안이 스타머의 “사회적 보수주의”와 대비를 이룬다고 평한다. 여기서 그 신문이 말하는 “사회적 보수주의”는 이민자나 국방, 범죄 등의 문제에서 보수당보다 한 술 더 뜨려고 애쓰는 것을 말한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용하는 한 노동당 고문은 스타머의 계획이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더 심화시킨 버전”이라고 주장한다. 전 노동당 대표 에드 밀리반드의 주도로 고안된 그 계획은 실로 바이든 정부가 경제 기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잘 보여 준다.

야심찬 정부 지출?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획자들은 꾸준히 국가 개입을 추구해 왔다. 이를 통해 경제를 재편하고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은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탄소 의존을 줄이는 데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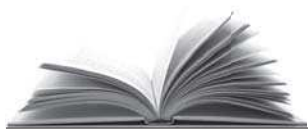
지난 6월 8일 바이든과 수낙이 발표한 “대서양 선언”은 강경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영국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들이 그 보조금의 일부를 차지하게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사실 노동당의 현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상대적 규모 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보다 훨씬 야심 찬 것이다. 영국 노동당의 녹색 보조금은 연간 280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 규모는 295억 파운드이지만, 미국은 인구가 영국의 다섯 배이고 국내총생산은 여덟 배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정부 차입안은 런던 금융가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기 시작했다. 노동당은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신자유주의 “재정 준칙”을 적극 받아들인다. 한 “스타머의 보좌관”은 “녹색 성장 계획과 재정 준칙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재정 준칙이 우선할 것이다.”(〈파이낸셜 타임스〉)

아니나 다를까, 6월 9일 리브스는 노동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차입 “증대”는 매년 점진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첫 임기 후반”이 돼서야 연 280억 파운드라는 목표액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아디트야 차크라보티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비꼬았다. “지구의 운명과 순 영터리인 재정 신뢰성 개념, 둘 사이의 선택에서 우리는 언제나 후자를 택할 것이다.”



책 소개 |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 (강태호 엮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가 결정적 의문”

우파는 2010년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일체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 왔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을 한미동맹 강화와 군비 확장의 근거로 이용했다.

최근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천안함 자폭'을 언급한 과거의 SNS 글로 집중 공격을 받아 스스로 물러났다.

물론 '천안함 자폭'은 음모론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발표 당시부터 술한 합리적 문제 제기에 부딪혀 왔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풍'의 소재로 활용했지만, 10여 일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은 논란이 한참이던 2010년 7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14명의 글을 엮어 출간됐다. 저자들이 제기하는 합리적 반론들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결코 쉽게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당시 정부가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5월 20일 “북한제 250킬로그램 중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정적 증거물'로 5월 15일 사고 해역 30~40미터 부근에서 건져 올린 어뢰 추진체 파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결정적 증거물은 오히려 “결정적 의문”을 낳았다. 특히 여러 과학자들이 매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책에는 그중 한 사람인 이승헌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의 글이 실려 있다.

저자들은 폭발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어뢰 추진체 외의 다른 파편과 부품, 외피 조각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천안함 선체를 가격한 흔적도 없기 때문이다.

합조단은 물의 저항 때문에 파편들이 천안함을 가격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작은 파편이 채 6미터도 밀리지 않았는데, 추진체와 같이 크고 무거운 부품이 어떻게 30미터 이상 밀려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합조단이 발표한 선체 내부 탄약과



우격다짐 정부가 북한 어뢰의 천안함 폭침 증거로 내놓은 어뢰 추진체의 '1번' 표기

사진에 탄약들이 가지런히 정돈된 상태인 것도 의문을 낳았다. 비유하자면 “다량의 생수를 차의 트렁크에 가지런히 싣고는 운전 중에 뒤처에 받혔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니 생수병들이 흐트러짐 없이 원상태로 있는 것과 같다.”

발견된 어뢰 추진체가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어뢰의 일부가 맞는지도 입증돼야 할 문제다. 합조단은 천안함과 어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하얀 흡착물질의 구성원자와 결정구조가 같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400미터

그러나 서재정 교수는 “A가 먹는 밥과 B가 먹는 밥의 구성원자도 같고 결정구조도 같으므로 두 밥이 같은 밥통에서 만든 것이라는 논리와 같다”고 논박한다. 다른 밥통, 즉 다른 이유에서 흡착된 물질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저자들은 이런 논리적 비약뿐만 아니라 합조단이 제시한 흡착물질 분석 데이터 자체에 대한 과학적 의문도 제기한다.

한편, 당시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조는 침몰 장면을 찍은 열영상관측장비 영상을 토대로 계산한 폭발 원점이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 원점과 최소 400미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또 다른 의문점을 낳았다. 실제 폭발 원점과 4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어뢰 추진체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발견된 어뢰 추진체가 북한제가 맞

는지도 논란거리다. 합조단은 어뢰 추진체 표면에 파란색 유성매직으로 쓰여 있는 '1번' 한글 표기가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에서도 쓰이는 표기법을 북한산 어뢰 표기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어떻게 폭발의 화염 속에서 '1번' 글씨만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뢰는 부식을 막기 위해 페인트를 칠해 놓는데, 폭발 시 열기로 “외부의 페인트가 탔다면 '1번'도 타야 했고, '1번'이 남아 있다면 외부의 페인트도 온전히 남아 있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진실을 알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조단 조사 인원 47명 중 “정부출연기관과 관련자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 연구자는 10명 이하”였다. 그중 한 명이었던 신상철 당시 <서프라이즈> 대표는 천안함의 항적 같은 기초적인 정보를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고, “당시 합조단에서는 ... '좌초'와 같은 다른 가설에 관해서는 일절 논의조차 할 수 없게 했다”고 책에서 말한다.

게다가 정부와 우파는 소송 등으로 문제 제기를 막으려 했다. 신상철 대표 역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해 지난해에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외치며 서해상의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당국이 맺은 합의들을 강그리 무시했고, 그 결과 서해에 긴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

강태호 엮음, 창비, 2010년, 308쪽, 16,000원

장이 쌓이고 있었다. 설령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이런 강경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보복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강경책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애꿎은 청년들을 희생시키며 비극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또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명분 삼아 후텐마 미 공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려던 하토야마 당시 일본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하토야마 정부가 물러나면서 갈등을 겪던 미일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을 다잡은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한반도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와 우파가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며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 책이 여전히 읽어 볼 가치가 있는 이유다.

임준형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이 글은 6월 14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회는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11번째 시간이었다.



4년 전인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투쟁이 분출했습니다. 홍콩 행정부가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송환법은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개정한 법안이었는데, 홍콩 사람들은 이 법이 명백히 홍콩의 진보 세력을 겨냥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는 급속히 커졌고 6월 9일 100만 명이 행진했습니다. 6월 15일에는 마르코 령(Marco Leung)이 홍콩 정부청사 근처에서 송환법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다음 날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홍콩 인구 740만 명 중 4분의 1 이상이 거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완강한 저항에 밀려 7월 초에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은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캐리 램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항쟁은 연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거대한 대중적 저항에 밀렸지만, 이후 대대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2020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송환법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왜 그토록 많은 홍콩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2020년 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오늘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홍콩 상황을 비롯한 2019년 항쟁의 근원을 돌아보고, 항쟁의 정치적 의미를 짚어 보려 합니다. 또, 2020년 보안법 도입 이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 보겠습니다.

1997년 반환 이후의 홍콩

홍콩은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후 1842년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홍콩 역사상 최대 저항 2020년 5월 24일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1997년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은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직접투자가 대부분 홍콩을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자본이 세계로 진출할 때도 홍콩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해외에서 기업공개(IPO)를 하려는 중국 기업 대부분이 홍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를 강화하고자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친시장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홍콩 자본가와 다국적기업들은 그로부터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노동자와 서민

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투자 및 유출입을 감독하기 위해 홍콩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홍콩의 민주적 권리를 후퇴시키려 했는데, 그때마다 대중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2002년 중국 정부는 테러 방지 명목으로 홍콩 기본법에 국가보안법을 삽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면서 이 시도는 좌절됐습니다.

2008년과 2009년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거대한 해방 운동이

벌어졌고, 2010년에는 '아랍의 봄'이 분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위챗 같은 SNS를 통제했고, 홍콩 중등학교의 사상 교육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윤리 교육 도입 시도는 대중적 저항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2014년에는 중국 정부가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뒤집은 것에 반발해 '우산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행정 중심지인 센트럴을 79일 동안 점거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비록 우산운동은 패배했지만, 이 투쟁에 참가한 청년들이 바로 2019년 항쟁에서 중심적 구실을 하게 됩니다.

홍콩 항쟁의 사회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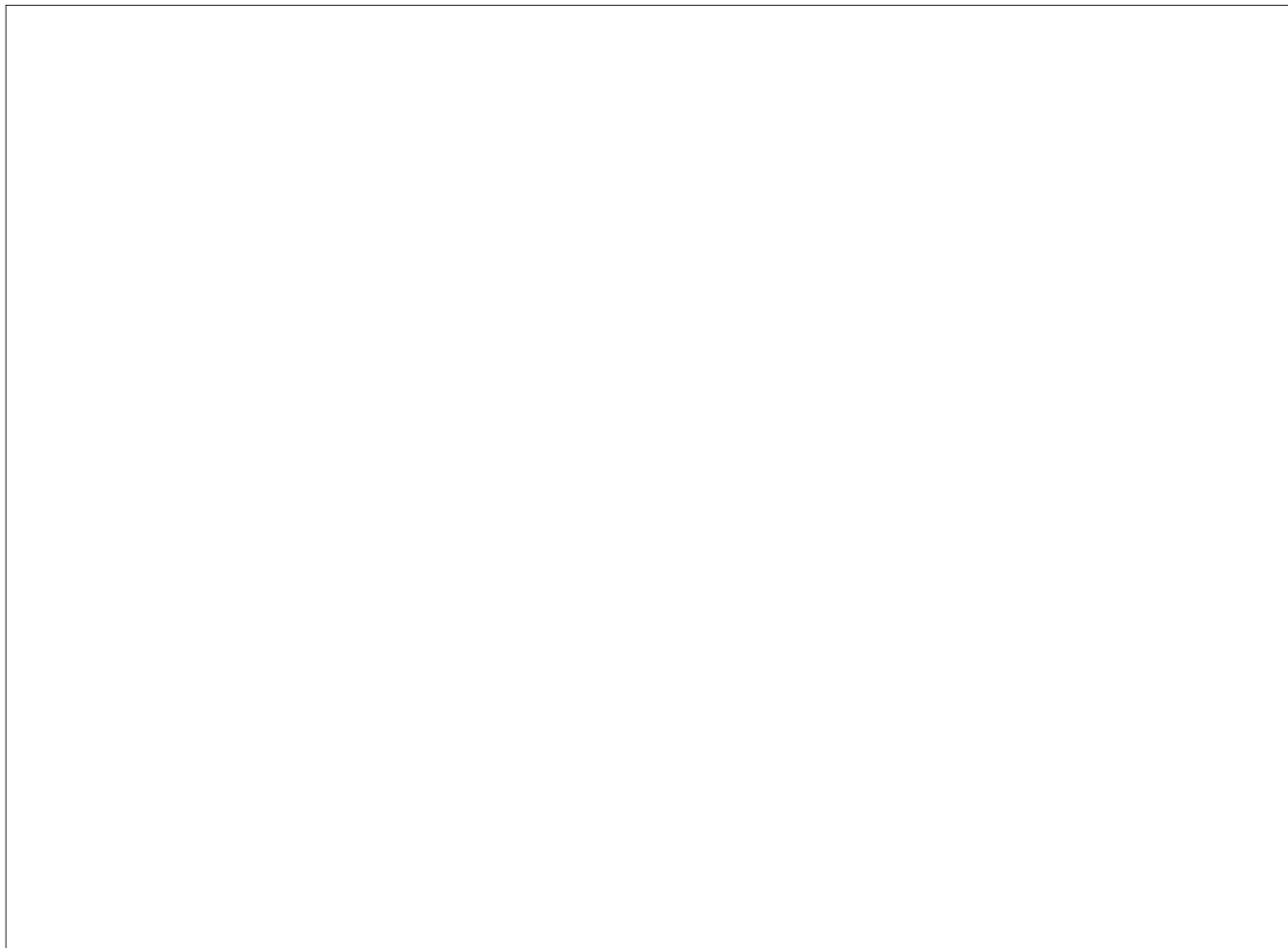
2019년 2월 12일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내놓자 시민인권전선은 1만 2000명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인권전선은 2002년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려 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하려고 만든 연대체입니다.

아무도 이 투쟁이 곧 수백만 명을 끌어들이 줄 몰랐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홍콩 사회주의자 아우룽유(Au Loong Yu)는 이들을



홍콩 항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중국 정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진 출처: USF United Social Press



홍콩의 심각한 주택 문제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2019년 항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97세대’라고 불렸습니다.

흔히 홍콩 항쟁은 중국 정부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측면만이 조명됩니다. 그러나 ‘97세대’의 광범한 참가는 홍콩 항쟁의 배경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빈부격차 심화 문제가 2019년 항쟁의 배경에 있습니다. 2018년 홍콩 인구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141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 빈곤도 똑같이 심각했습니다. 홍콩청소년단체연합회의 청소년연구센터가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대학 졸업자 중 29.8퍼센트가, 대학을 다니지 못한 사람 중 35.6퍼센트가 자신을 ‘워킹 푸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홍콩 대중이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는 홍콩 반환 이후 중국 정부가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홍콩 행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기업 지원을 추진하면서 노년층 보조금 혜택은 줄였습니다. 홍콩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법적 규제는 거의 없는 자본의 천국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 투자하는 자본을 위해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고속 철과 인공섬 건설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지만, 청년과 빈곤층은 외면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부자들이 홍콩으로 이주하면서 주택 가격이 치솟은 것도 홍콩 대중의 삶을 악화시켰습니다. 한 아파트를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개서 임대한 “당방(劏房)”에 거주하는 사람이 홍콩 항쟁 무렵 20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7세대’는 “정치적 자치권”뿐 아니라 “경제적 자치권”이 부정당하는 현실에 절망과 분노를 느껴 왔습니다. 바로 이것, 즉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조건 악화가 2014년 우산운동과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중국 대 홍콩의 대결?

홍콩 항쟁은 ‘홍콩인과 대륙 중국인 간의 대결’ 또는 ‘홍콩 대 중국의 대결’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홍콩 자본가들은 자신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것에 조금 불만이 있긴 하지만, 친시장적인 중국 정부와 홍콩 행정부에 대해 평범한 홍콩 대중과는 달리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주로서 겪는 일부 어려움은 입법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직능대표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 노동자들은 중국 정부가 홍콩 운동을 억압하는 것에서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홍콩 운동이 파괴되는 것이 중국 대륙 노동자들에게도 해롭습니다. 홍콩의 좌파 활동가들은 선전과 광저우 등지에서 노동조합 설립과 파업 투쟁 지원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15년 광저우의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시진핑 정부는 곧이어 홍콩 좌파 세력을 겨냥한 송환법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이를 보면, 중국 정부가 홍콩의 저항운동과 광저우의 노동운동을 별개의 분리된 문제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륙 노동자와의 연대는 홍콩 운동이

전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민주적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홍콩 정체성 추구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홍콩의 민주 세력들은 중국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선거를 통해 민주적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에 무자비한 탄압으로 나오자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본토주의’(localism) 경향이 등장했습니다. 학생 중심 단체들인 청년신정, 데모시스토, 본토민주전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홍콩 본토주의 경향은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어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들지만, 대체로 중화주의에 대립되는 홍콩 정체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중국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모으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홍콩 사회주의자 람치렁은 홍콩 본토주의가 2019년 항쟁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소수였지만 대륙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가들은 대륙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중국어 간체로 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항쟁이 봉착한 문제들

이제 홍콩 항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에 부딪힌 캐리 램은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7월 초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폭력 조사, 시위자 석방, 폭동 규정 철회, 사퇴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경찰 폭력도 더 심해졌습니다.



홍콩의 항쟁과 중국 노동자 저항은 만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체불임금에 항의하는 선전의 노동자 투쟁

그러나 홍콩 대중은 저항을 이어갔고, 진정한 변화를 쟁취할 잠재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8월 들어 공무원, 간호사, 금융부문 등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 5일에는 첫 번째 성공적인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에서 50년 만에 벌어진 정치 파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9월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은 무산됐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거리에서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던 그때, 2차 총파업이 성공했다면 투쟁이 전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동자 투쟁이 주춤하는 사이에 학생들이 이어받은 저항은 11월 홍콩중문대와 홍콩 폴리텍대의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패배를 겪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시민인권전선의 호소에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파 의원이 452석 중 389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대중 운동은 중국 정부의 지속되는 탄압으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홍콩 항쟁이 반년 이어지는 동안 국제 좌파들 대부분은 방관하며 사실상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미국의 견제자로 보기 때문일 수 있고, 홍콩 항쟁 참가자들을 친서방적으로 보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홍콩 항쟁이 벌어졌던 2019년은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홍콩 민주화 진영 내에는 미국에 '홍콩의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트럼프가 홍콩을 구원하다"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시위 참가자 중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근거로 홍콩 항쟁을 친미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인사들이 참가한다고 해서 그 운동을 민주당 집회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같은 미국 정치인들이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홍콩 항쟁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홍콩 항쟁을 이용하는 것이지 홍콩 대중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중국 정부 2021년 6월 강제 폐간된 〈빈과일보〉 마지막 호를 들고 항의하는 시민들

항쟁 이후의 홍콩

2019년 연말 이후 홍콩 항쟁은 중국 정부의 지속적 탄압으로 점차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게다가 2020년 1월부터 홍콩에서 코로나19가 퍼지자 시위가 취소되고 운동이 위축됐습니다.

시진핑과 캐리 램은 대대적인 경찰 탄압과 팬데믹을 명분 삼은 집회 금지 등 반격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6월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부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모호한 혐의를 처벌하는 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53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고, 탄압에 직면한 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야당, 노동조합, 학생회, NGO, 종교단체, 신문사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에게 충성 서약을 강요했고, 중등학교에서 국민윤리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교육을 광둥어가 아닌 보통화로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6일 전직 야당 의원과 활동가 등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년째 구금돼 있는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국가 정권 전복입니다. 야권 후보를 정하기 위해 2020년 7월 실시한 예비선거를 두고 입법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 홍콩 정부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정부 전복 계획이라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1년에 아예 선거법을 개정해 친정부 인사만 홍콩 입법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을 반환받을 때 했던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과 고도자치(高度自治: 높은 수준의 자치) 약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좌파의 과제

2014년 우산운동에 이어 2019년 항쟁이 패배하고 엄중한 국가보안법 탄압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홍콩에서 대중 운동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항쟁의 원인인 대중적 곤경은 사라지지 않았고, 항쟁은 상당한 사상적 자양분을 남겼습니다. 홍콩 청년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신노조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노조운동은 막 노동자가 된 신세대 청년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홍콩 항쟁은 정치적 과제와 교훈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 계급의 고유한 힘이 사용되어야 하고, 정치적 쟁점과 사회경제적 요구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륙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중요합니다. 홍콩은 이미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 경제에 고도로 통합된 도시이기에, 홍콩의 미래는 중국 전체의 미래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콩 대중과 대륙 노동자의 연대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대륙에서 "백지시위"가 일어나 제로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던 시진핑을 한발 물러서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홍콩 항쟁 참가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홍콩 항쟁은 정치의 중요성도 보여 줍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투쟁과 연대를 건설하려면, 중국이 서방 자본주의와 형태는 달라도 본질이 같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임을 인식하고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을 제국주의 경쟁으로 파악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홍콩 대중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다음번 투쟁은 2019년 항쟁이 끝난 지점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명적 조직이 대륙과 홍콩에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를 염원합니다.

※ 발제자의 토론 정리는 온라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50년 만의 정치파업 2019년 8월 5일 총파업을 벌여 홍콩을 마비시킨 노동자들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요구가 커지다

최근 성소수자 운동에서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2월 동성 부부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이긴 것이 그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혼뿐 아니라 그보다 느슨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가 단지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동성 부부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로 규정했다. 법원이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성소수자들이 거둔 소중한 승리였다. 1심 패소 뒤 거둔 승리라 기쁨이 더 컸다. “사랑이 이겼다!”는 환호가 넘쳤고, 기대도 커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과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했다.(다른 하나는 비혼출산지원법이다.) 그 얼마 전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그간 논의는 무성했지만 국회 발의는 처음이다. 이 나라 국회가 워낙 보수적이라 발의 요건조차 채우기 어려웠던 탓이다. 이번 발의는 가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이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커져 온 현실을 반영한다.

올해 5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40퍼센트가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했다. 조사를 시작한 2001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다. 젊은 층(20~30대)에서는 찬성이 절반이 넘는다.

배제와 차별

동성 관계의 법적 인정은 성소수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많은 성소수자가 파트너와 함께 살아가고, 그중 상당수가 파트너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간다. 최근에는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수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혼인도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배제되는 동성 관계는 체계적으로 차별받아 왔다.



동성 관계는 법적 가족에서 배제돼 여러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다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성소수자 1056명은 이렇게 말했다. “동성 커플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 연금 등 사회보장 측면은 물론,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의 법률관계 등 생활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불이익과 어려움은 이렇다: 상속, 장례, 연금 수급, 재산 분할 청구,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자 인정이나 중환자실 면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주거 복지, 배우자의 체류허가(비자), 세제 혜택, 가족수당, 경조휴가 등.

이런 차별 뒤에 있는 동성 커플의 실제 삶은 정말이지 안타깝고 애달픈 일이다. ‘보호자’가 되지 못해 응급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연, 사랑하는이의 장례식에서 배제된 사연 등.

물론 법적 가족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결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적 배제는 명백한 차별이다. 결혼이나 결합(또는 이혼이나 분리)은 온전한 개인의 선택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동성혼과 시민 결합을 지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서구에서는 2000년대부터 동성혼이 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현재 아시아 국가인 대만을 포함해 34개 국가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돼 있다. OECD 국가 중 동성 부부에게 아무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한국뿐이다.

동성혼을 포함해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높아져 온 데 반해,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성소수자 권리 요구를 무시해 왔다. 앞장서서 성소수

자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세력은 기독교 우파인데, 이들은 잘 조직돼 있고 지배계급 일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동성혼 인정은 고사하고 비혼 동거나 위탁 가정 등 법적 가족의 범위를 약간이라도 확대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국민의힘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인물들이 득시글하다.

악의적 무시

민주당 개혁파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 권리에 목소리를 함께 내 왔지만 매우 불충분했다. 성소수자 차별적인 민주당 주류 인사들과 제대로 대결하지도 않았고, 선거 때만 되면 우파의 압력을 받아 슬그머니 말을 흐렸다.

주류 정당의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가족제도를 유지·강화하려는 지배계급 일반의 이해관계와 관련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주요 국가들에서도 동성혼 법제화 과정에서 종종 격렬한 논쟁과 투쟁이 있었다. 우

파와 파시스트, 보수 기독교는 동성혼을 극렬 반대했다. 그 나라 지배자들이 진보적이어서 동성혼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 운동의 50년 넘는 전통과 투쟁, 연대, 여론의 변화 등 덕분이다.

한편, 동성혼을 쟁취한 서구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일상생활, 직장, 공공장소 등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극우가 부상하는 곳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도 강화됐다. 한 번 쟁취된 개혁도 상황에 따라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됐다.

성소수자 차별의 근원인 자본주의(더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가족제도)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성소수자가 이성애 부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동성혼과 같은 개혁을 쟁취하는 투쟁이 차별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도전과 맞물려야 함도 주장해야 한다.

성지현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성공하고 있는가?

제국주의간 전쟁이 초래한 막대한 비용을 보여 줄 뿐

김인식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반격의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대다수 한국 언론들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듯이 보도한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쟁 프로파간다이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도네츠크주의 작은 마을 네 곳을 탈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최전선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달 동안 점령지에 다양한 요새로 이뤄진 삼중 방어선을 구축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장교 세르히 아다모비치는 “믿기지 않는 수준의 참호와 요새”를 뚫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반격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2 탱크 3대,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 8대 등 서방이 제공한 무기 상당수를 잃어버리거나 파괴당했다(〈뉴욕 타임스〉).

젤렌스키는 점령지 탈환을 두고 “해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듯하다.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 다수는 러시아어 사용자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가 섞여 있는 가족들도 많다. 주민의 대다수는 전쟁은 순전히 미친 짓이고 불필요한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블링컨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반격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원이 극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2500만 달러(41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원조 패키지를 발표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40번째 지원이다.

블링컨은 7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더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폭로됐다.



국방부 제공

우크라이나 남부 전장에서 서방이 지원한 우크라이나군의 탱크를 파괴했다며 러시아 측이 공개한 영상 사진

러시아가 굴복할 때까지 전쟁 지속하겠다는 미국

두루 알다시피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러자 서방은 세계 2위의 핵 강대국인 러시아를 군사적·외교적으로 약화시키려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했다.

러시아는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 덕분에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 동부를 손쉽게 점령했다. 그러자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탄약을 지원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나

토와 러시아 간의 공공연한(어쩌면 핵) 대결로 번질 수 있다는 서방의 전쟁 초반 공포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전차·전투기·탄도요격미사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6월 12일 미국 국무부 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번 “대반격”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다.

“반격의 성공은 두 가지 효과를 낼 것이다. 향후 있을 수 있는 협상 테이블

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고, 푸틴이 결국 종전 협상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블링컨은 그 평화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한 뒤 다시 공격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노바 카호우카댐 파괴의 진정한 책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날아온 가장 중요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이 기대했던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이 아니라 노바 카호우카댐의 파괴다.

댐의 붕괴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하겠지만 엄청난 재난을 초래했고, 그 여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본지 이원웅 기자가 지난 호에 쓴 ‘우크라이나 댐 파괴: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를 보시오.)

우크라이나 국영 수력발전 회사 우크르하이드로에네르노의 대표에 따르면, 파괴된 댐을 복구하는 데만 5년 동안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댐 붕괴 재난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서로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수공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서방 언론(과 주류 한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반면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누가 그 댐의 붕괴에 진정한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그 댐의 파괴로 인한 군사적 이익과 손실이 모두 있다.

그래서 양국 군대에 의한 폭파나 사보타주보다는 양국의 무관심과 방치가 댐 붕괴의 원인인 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개전 이래 헤르손 동남부와 그 댐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댐 관리

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노바 카호우카댐의 저수량이 최근 30년 이래 가장 낮았다. 그러다 5월에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갔다.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댐 건설로 생겨난 인공 호수 내 인공 섬들로 물이 흘러들어 갔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 댐을 여러 차례 포격했다. 11월 11일 우크라이나의 포격으로 댐을 지나는 도로가 파손돼 차량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한다고 비난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바 카호우카댐 붕괴 재난의 진정한 책임은 전쟁 자체에 있다. 그리고 전쟁의 책임은 본지가 수차례 밝혔듯이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에 있다.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의 핵심 목적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법안 발의 취지에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무효 판결이 언급되며 임금체계에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압박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제화된다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부이다. 정부는 이를 경사노위나 고용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려 했는데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모델로 부각하려 한 “조선업 상생협약”은 주목을 끌지 못했고 효과도 없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아예 직무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해 온 상황을 타개하려는 다급함의 발로이다.

근로시간 개악안(이른바 “주69시간 근무제”)과 달리 이 법안은 야당의 협조를 얻기 쉬울 것이라고 보고 법안을 발의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직무급제를 도입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도 긍정적인 입장(〈조선비즈〉)을 표명했다.

직무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기간제·파견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미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법 규정이 현실에서는 공문구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직무급제를 추진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무급제 폐지”를 요구한다

였다면 비정규직·여성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 될 것이다.

직무급제는 임금 차별 해소책이 아니라 임금 억제책일 뿐이다. 현재의 임금체계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성을 제거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세워 직무급제를 추진했지만, 당시 도입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광주형 일자리 직무급제는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것일 뿐이었다(하향평준화).

고용 형태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 좁혀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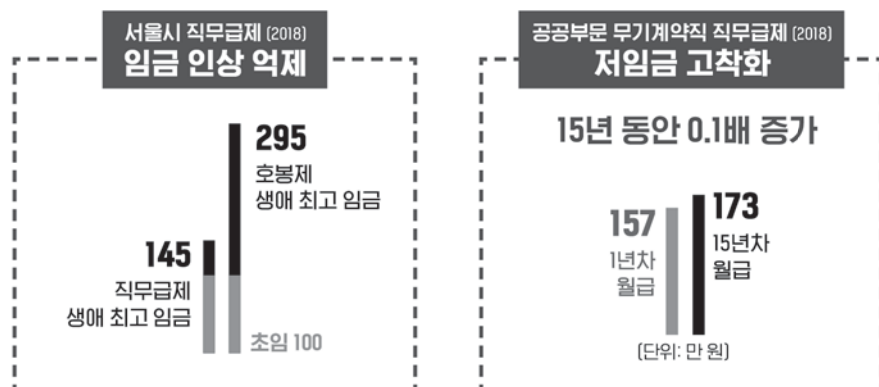
게다가 직무 평가와 가치 부여는 온전히 사용자의 권한(이번 개정안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으로, 사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분열시킬 수 있다.

노동운동 일각의 주장처럼 설사 노조가 직무 평가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보다는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직무급제에 대해 노조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내기 십상이다.

혼란

그런데 진보적 지식인과 좌파의 일부는 이번 법안에 혼란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 인터뷰를 보면 “국민의 힘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이병훈 중앙대

직무급제, 공정은커녕 임금 하향 평준화



교수)고 환영하거나 “동일가치노동 기준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는 주문을 덧붙이는 수준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의원은 우려스럽게도 “국힘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입법 환영”의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직무급형 임금체계로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임금 격차가 기업별 연공서열 때문이라는 잘못된 시각의 발로다.

그러나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임금 개편은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사용자들이 2000년대부터 집요하게 추진해 온 것이다. 이 사용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 세력 아닌가?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필

요성을 강조했는데, 정부의 탄압에 항의해 한국노총 지도부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투쟁보다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계를 개악하는 것이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생계비 위기 속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실질임금은 삭감돼 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가 직무성과급제 개편 등에 반대해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투쟁에 나서기 좋은 상황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임금체계 개악 시도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혁명적 좌파는 정부의 위선과 이간질을 폭로하며 기층의 투쟁이 강화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김광일

재현 가능성 커진 저축은행 부도 사태

정부는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제2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총 18곳이 1차 점검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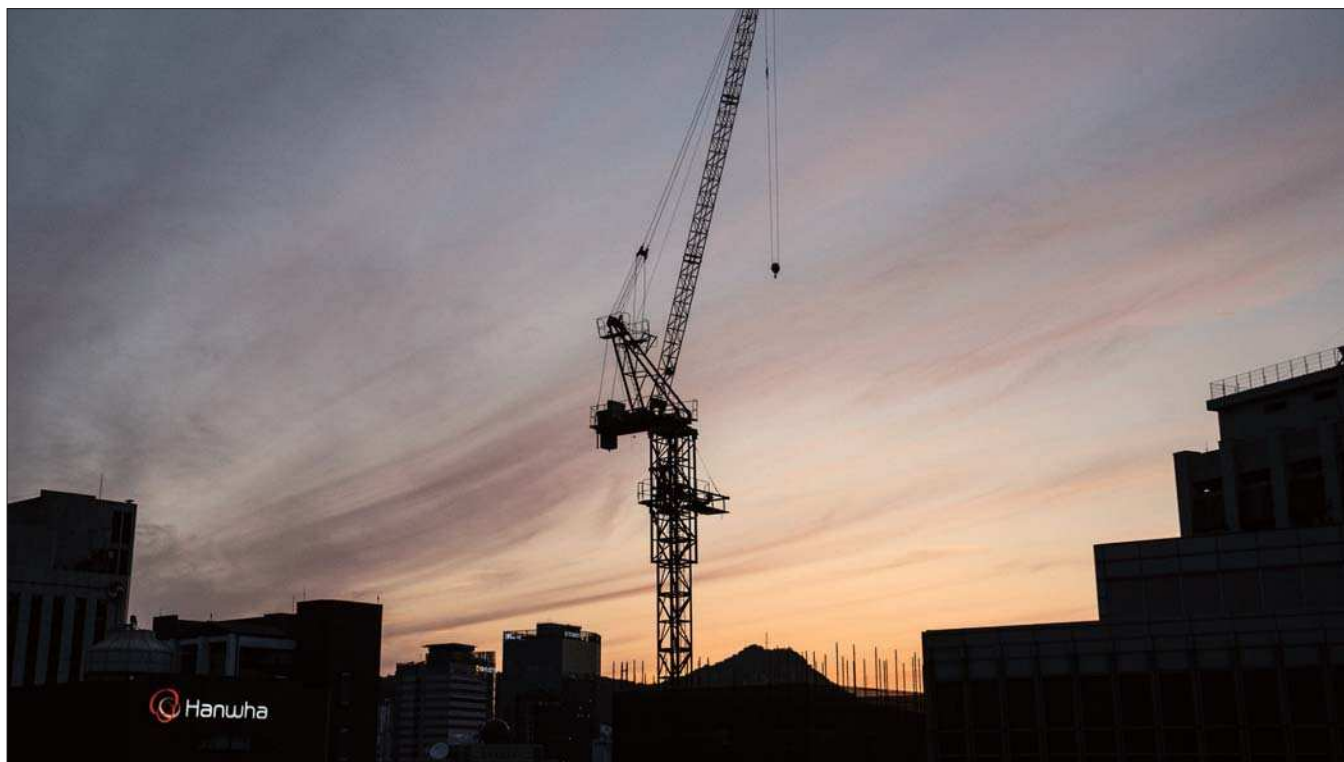
제2금융권 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때문이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을 늘려 온 제2금융권이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PF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잔액(36조 8000억 원) 중 21조 4000억 원이 올해에 만기가 도래한다.

특히 취약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기업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대출 비중은 208퍼센트로, 증권사(31퍼센트), 캐피탈사(93퍼센트)보다도 크게 높았다.

자산 규모 상위 10위 저축은행들인 OK·웰컴·다올·상상인 등이 보유한 잠재 부실만 5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2011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조만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24곳이 문을 닫고, 10만여 명이 큰 손해를 봤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제2금융권이 부실 채권을 최대한 빨리 처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취약한 저축은행들의 부도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

리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오는 9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시했던 자영업자 대출 연장 조치가 끝나 또다시 부실 채권이 대거 늘어나기 전에 PF 대출 위험을 어느 정도 줄여 놓으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올 하반기에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1억~2억 원 정도 하락한 경우가 많아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서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이 넘는 102만 6000가구라고 밝혔다. 전세 시세가 종전보다 평균 7100만 원씩 낮아져,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지급을 위해 대략 73조 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하면서 다시 집값과 전셋값이 더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어 금융권 전반에 불안정을 높일 것이다.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도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가계 대출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는 부실 채권을 늘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경기 저점?

한편, 정부는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둔화의 핵심 원인인 수출 감소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감소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6월 15일에 현행 5.25퍼센트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는 5.6퍼센트까지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2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세계 곳곳에서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은행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전 세계 사무실 공실률은 12.9퍼센트로 세계 금융위기 수준(13.1퍼센트)에 육박했다. 2025년까지 1조 5000억 달러(약 2000조 원)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고 한다.

이런 세계적인 금융 불안정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켜 한국 수출과 기업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연 3.5퍼센트로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한·미 간의 금리 차이를 더욱 확대해 외화 자금이 빠져 나가는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 개악을 추진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 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정이 심화될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고물가·고금리로 벌어진 생계비 위기에 맞서 실질임금을 방어하기 위한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강동훈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wspaper.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논평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7월 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자들도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상황 변화다. 이미 5월 10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노동 탄압에 항의해 양회동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한 직후였다. 5월 31일 서울에서 대규모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번에 “각계각층 단체”들이 윤석열 퇴진 투쟁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서에는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악행들이 아래와 같이 열거돼 있다.

노조 탄압과 양회동 열사 분신 등 반노동 정책, 부자 감세와 서민 생활고 가중, 친일·친미 행각과 한반도 평화 위협,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묵인, 공안 통치, 집회 결사의 자유 탄압, 양곡관리법 거부, 도시 빈민 활동가들 구속 등등.

윤석열 정부는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의 한국 사회”(앞에서 언급한 제안서)로 만들려 하지만 이에 대한 반감이 광범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인기가 없다. 오죽하면 윤석열 자신이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겠는가.

윤석열은 불만의 확산을 강압으로 차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 원성과 반발을 사고 있다.



5월 31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은 반정부 정서의 정도를 가늠할 바로미터다.

한국노총은 온건한 노조이고(더는 ‘어용 노조’가 아닌 지 오래됐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계속 참여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을 길들이려고(한국노총의 현 집행부는 친민주당 성향이다) 강하게 압박했다가 도리어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지배계급은 강압을 통해서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이끌어 낼 이러저러한 수단들을 찾는데, 이때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안 그래도 복합 위기로 인해 양보의 여지가

적어 빈약했던 윤석열 정부의 동의 수단을 더한층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부·여당은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재편하겠다는 식으로 노조 갈라치기를 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면, 반년 전 온건 좌파가 윤석열 ‘악마화’를 문제 삼으며(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퇴진 요구 제출을 반대한 것이 매우 짧은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촛불행동

그런데 윤석열 퇴진 운동의 첫 포문을 연 것은 촛불행동(촛불승리전환행

동)이었다. 지난 1년 동안 기복을 겪기도 했고 현재는 다소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긴 하지만, 촛불행동은 1년 넘게 끈질기게 매주 퇴진 집회·시위를 열어 왔다.

윤석열 퇴진 운동이 조직 노동계급 쪽으로 확대된 데에는 촛불행동의 기여가 적잖이 있다. 촛불행동은 화물연대·건설노조 등 노동조합 투쟁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투쟁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촛불 집회에 연사로 초청해 연대를 나타냈다. 양회동 열사는 강릉 촛불행동 회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촛불행동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윤석열 퇴진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령이 상이한 정치 세력과 개인들이 얼마든지 윤석열 퇴진이라는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 되면 윤석열 퇴진 운동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이 제안한 윤석열 퇴진 운동은 현재 그 방향을 향해 있지는 않은 듯하다. 아마도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운동과 총선 대응을 연결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사실 촛불행동 내 일부도 그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다.)

이 구상은 퇴진 투쟁의 성과를 특정 정당의 선거 성적으로 집약시키는 것이다. <민플러스>는 이를 두고 “유일한 총선 준비는 윤석열 퇴진 투쟁”이라고 요약했다.

물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패퇴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각 세력의 선거 대응 계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윤석열 퇴진을 위한 광범한 단결 행동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김인식 본지 발행인

▶ 16면에서 이어짐

응한 대체인력 투입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현장 점거를 전면 금지하려 한다.

또한 정부의 공격은 올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수년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왔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버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공무원과 교사들, 수년 만에 호황을 맞

은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이 그렇다.

한편, 정부·여당은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허용 안을 내놓았다. 일종의 당근책이다.

역대 정부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외면해 왔다. 이 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이나 연차·생리휴가 적용에서 제외되고, 해고도 자유로웠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이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속 보이는 수작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세우며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을 임금 격차의 주범으로 몰아세운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수십 년째 불법 파견을 묵인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는 정부야말로 불평등 확대의 주범이다.

정부의 속셈은 투쟁적인 곳을 탄압하여 위축시키고, 노동계급을 갈라치기 해서 노동개혁의 동력을 얻으려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건설노조 수사 특진 경찰관 수를 50명에서 90명으로 늘렸다. 윤석열이 노동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탄압과 이간질에 맞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더 많이 더 크게 벌어져야 한다.

신정환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시도를 막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운동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5월 1일 노조 탄압에 항의해 양회동 열사가 분신한 뒤, 건설노조는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는 즉시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윤석열 운동이 확대될 것을 미연에 차단하려고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시기상으로서는 7월 민주노총 파업을 앞두고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후 국가기관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공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5월 31일 양회동 열사 분향소 강제 철거, 6월 9일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 5월 30~31일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 폭력연행(김준영 사무처장은 구속)

- 5월 26일과 6월 9일, 불법 파견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요구한 대법원 앞 문화제 강제 해산

- 5월 24일,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 찬반 투표를 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4인 검찰 송치

- 6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과 학비노조 제주지부장의 신체, 자택, 휴대전화 압수수색

본지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 윤석열의 강공책은 윤석열 정부가 처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격화되는 제국주의 간 경쟁 속에서



5월 31일 양회동 열사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있는 경찰

한국 자본주의의 수익성을 키우고 국가 위상을 높여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은 윤석열에게 '노동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채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지난 1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주 69시간제' 반발에서 보듯 노동개혁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상당하다. 한두 박자 느리고 불충분한 측면은 있으나 조직 노동운동은 저항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이 노동자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며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조바심이 크다.

윤석열의 집회·시위 공격은 서구 국가들을 포함해 최근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의 일부다.

미국에서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대응해 시위를 더 옥죄는 법들이 주별로 도입됐다. 영국에선 집회·시위법과 공공질서법이 개악됐다. 모두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다. 프랑스 경찰은 연금 개악 반대 시위대와 환경 파괴 반대 시위대를 두들겨 패기도 했다.

이는 각국 지배자들이 국가 권력(경찰, 검찰 등 국가기구의 억압 능력)을 이용해 위태로운 경제를 관리하고 저항을 억누르려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노조 자체를 말살시키려거나(현재 계급 세력 관계상 가능치가 않다) 사회적 대화를 원천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 투쟁적인 곳을 공격해 고립·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온건파들이 대화에 나서 노동개혁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분열과 이간질

이는 정부의 공격을 받았거나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 곳을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1~12월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대응한 이후,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두 노조는 점거 파업과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자주 벌여 왔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5월 4일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정의선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방문했을 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인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들은 2021년 자회사 설립 반대 파업 등을 주도한 전투적 활동가들이었다.

6월 14일 국민의힘 민생특위는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맹비난하며, 노조의 파업 효과를 약화시키는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년간 노동조합 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과로사를 줄이는 등 조건을 개선해 왔다. 지난해 초엔 CJ대한통운 본사 로비와 2층을 점거했고 최근엔 쿠팡에서도 택배노조 지회들이 속속 창립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도 일치한다. 정부는 쟁의행위에 대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일시 | 6월 28일(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문가

참가신청

bit.ly/0628-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